

#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정책과 시사점\*

김 성 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 론

국가재정은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재정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으로 복지관련 재정지출 증가압력이 점차 상승하는 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위축되는 등 재정여건은 호의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재정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전반에 걸친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재정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과거 일본의 경험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인구 및 산업 등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악화된 바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복기하는 작업은 향후 우리 경제가 본받아야 할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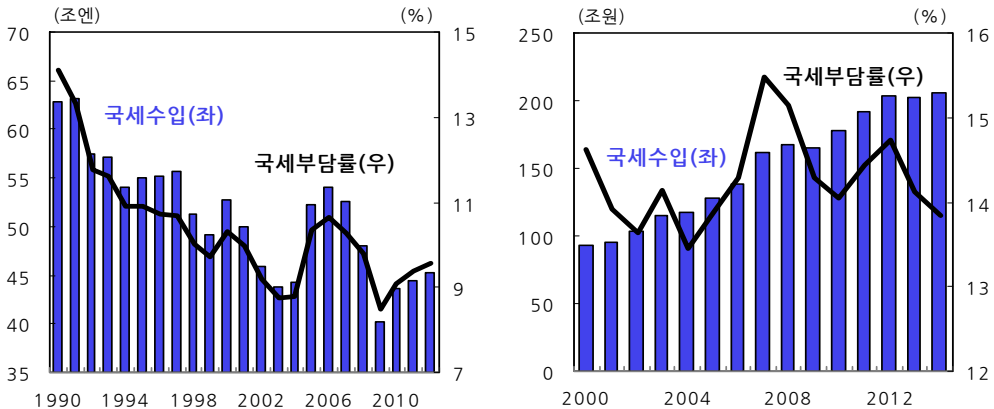
\* 본 원고는 2015년 8월 27일(목),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하계 정책심포지엄,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 과제 그리고 미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우리경제의 역동성: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03, 조동철 편)의 제9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2. 재정수입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1) 재정수입 추이

일본의 중앙정부 조세수입은 1990년에 62.8조엔(GDP 대비 14.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45.3조엔(GDP 대비 9.6%)에 머물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조세수입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의 명목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고이즈미 총리의 집권기간 중에는 일련의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조세수입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조세수입 여건이 다시 악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수입이 감소하지는 않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국세부담률(국세수입/명목GDP)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1)</sup>

<그림 1> 일본(좌)과 한국(우)의 국세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일본 재무성.

일본의 재정수입 감소 원인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디플레이션에 따른 경상성장률의 하락이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0.8% 내외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경상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2012년 명목GDP는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원인은 바로 감세정책이다. 일본은 1994년, 1998년, 1999년에 3단계에 걸쳐 감세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sup>2)</sup> 그 결과 간접세 수입은 1990년에 16.5조원에서 2012년에 19.5조원을 기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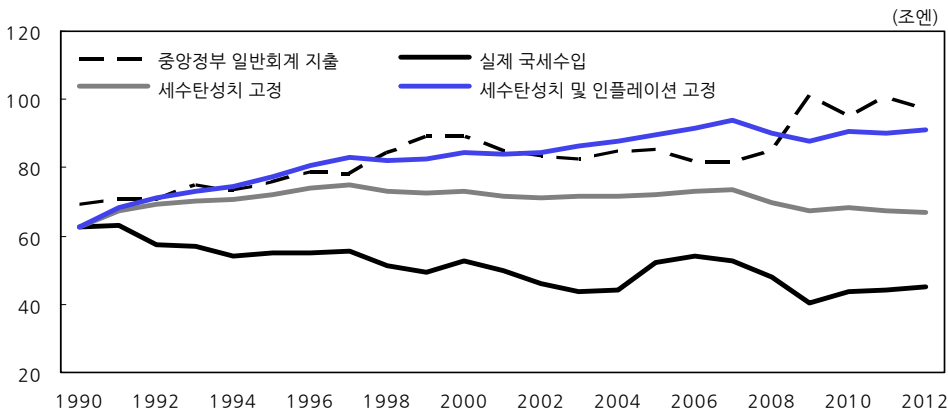
1) 2000년대 들어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이 8.3%를 기록하며 세입여건이 양호한 모습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4.6%까지 하락하였다.

2) 1994년에는 지속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감세정책으로 소득세 관련 공제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기가 급락하였는데, 이에 따라 1998년에는 1997년의 소

있는 반면, 직접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실적 부진에 기인하여 1990년에 46.3조엔에서 2012년에는 25.9조엔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률 제고와 병행되지 못하면서 영구적인 세입기반 약화만을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제반여건 변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의 조세수입을 기점으로 설정한 후, 매년 2%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되고 1990년 당시의 조세정책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조세수입 추이를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경상성장률하에서 감세정책이 없었을 경우 조세수입은 2012년 1990년 수준(62.8조엔)을 소폭 상회하는 67.1조엔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2년의 실제 조세수입(45.3조엔)보다 21.8조엔이 많은 금액이다. 한편, 물가상승률이 2%로 유지되고 조세정책도 동일하다고 전제한 경우에는 2012년 조세수입이 91.2조엔인 것으로 시산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재정지출(97.1조엔)과 비슷한 수준이다. 즉, 일본의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감세정책도 없었더라면 일본의 재정수지는 현재와 같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림 2> 일본의 조세수입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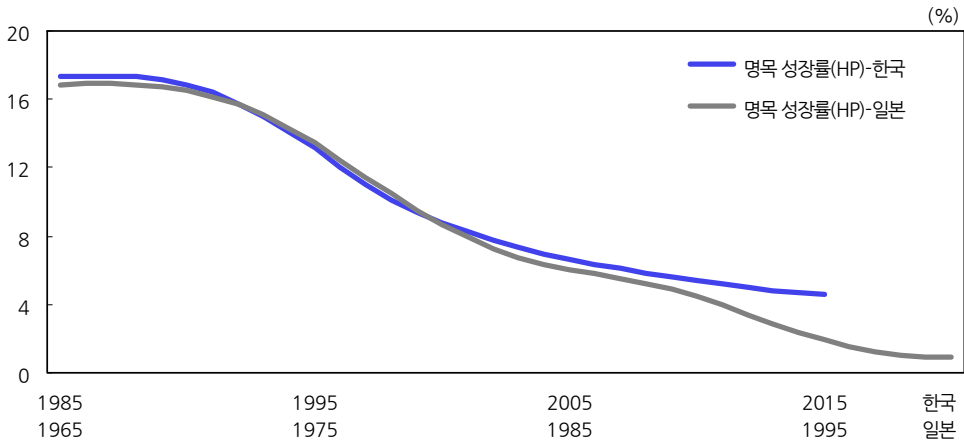
자료: 일본 재무성 및 필자 작성.

1990년대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명목성장률의 하락이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명목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였으나,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정체되어 있다. 특히, 2013~2014년에는 3% 내외의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0%대

비세 인상(3%→5%)에 대한 대응조치로 법인세율 인하 및 소득세 특별감세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개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50%에서 37%로 인하하였으며, 법인세의 기본세율도 종전 34.5%에서 30%로 인하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대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명목성장률은 3% 후반을 기록하였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가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의 낮은 명목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3>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



자료: 필자 작성.

## 2) 세목별 비교

최근의 우리나라와 1990년대 이후 일본 모두에서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는 국세 탄성치(국세수입 증가율/명목성장률)의 하락이다. 누진세 구조에서 국세탄성치는 1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 일본과 같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금융위기 이후 국세수입 증가율 및 명목성장률 추세간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실제로 2013~14년 명목성장률은 각각 3.8% 및 3.9%였으나, 국세수입 증가율은 -0.5%, 1.8%에 불과하다.

따라서 세목별 세수실적 변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국세 탄성치 하락이 일시적 혹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세입여건을 조망해 보았다.<sup>3)</sup>

3) 세목별로 세수실적( $T$ )을 세원( $Y$ )과 그 이외의 요인(부담률,  $\tau$ )으로 구분하고, 세수실적의 변화 중 부담률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와 해당 시기의 조세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부담률 변화의 원인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세목별 세수실적( $T$ )=부담률( $\tau$ )\*세원( $Y$ )이므로,  $\Delta T \approx \Delta \tau Y + \tau \Delta Y$ 로 분해할 수 있다. 여기서 소득관련 세수의 세원은 각각 가계 및 기업의 소득, 부가가치세의 세원은 생산(지출)과 관련된 내수(총소비 및 총투자)이다. 한편, 부담률( $\tau$ )은 조세당국의 세정 혹은 세율, 경제구조 변화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세원이 동일한 경우라도 부담률의 하락은 세입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가. 소득세<sup>4)</sup>

소득세 분해 결과, 일본은 소득세제 관련 제도의 완화로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는 오히려 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가계소득이 소폭이나마 증가(1990년 308.5조엔→1999년 336.9조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소득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률의 하락은 1990년대에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 특별감세 및 공제 확대, 세율인하 등 소득세 관련 제도를 대폭 완화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소득세 부담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수 증가(17조원)의 30% 정도가 부담률(6조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 관련 부담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세율의 큰 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책적 노력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가계소득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과거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소득세수가 감소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 나. 법인세<sup>5)</sup>

법인세수는 1990년대 일본과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모두에서 부담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법인세 관련 조세부담 완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법인세 감소의 대부분이 기업소득 부진에 기인하며, 부담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나타났다. 일본의 법인세는 1990년 18.4조엔에서 1999년 10.8조엔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중 80% 정도는 기업소득 감소로, 나머지 20% 정도는 부담률 변화로 설명된다. 부담률의 변화 원인으로는 1990년대 초중반의 기업 관련 조세지출 확대 및 1998년 법인세 인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또한 금융위기 이후 부담률이 소폭 하락한 바, 이는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된 법인세율 인하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008년 대비 2014년 법인세수는 3조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 중 법인소득은 7조원 정도 법인세수를 증가시킨 반면, 부담률은 4조원 정도 감소시키는 요인이 있었다.

### 다. 부가가치세<sup>6)</sup>

부가가치세는 1990년대 일본과 최근 우리나라 모두에서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세원 이외의 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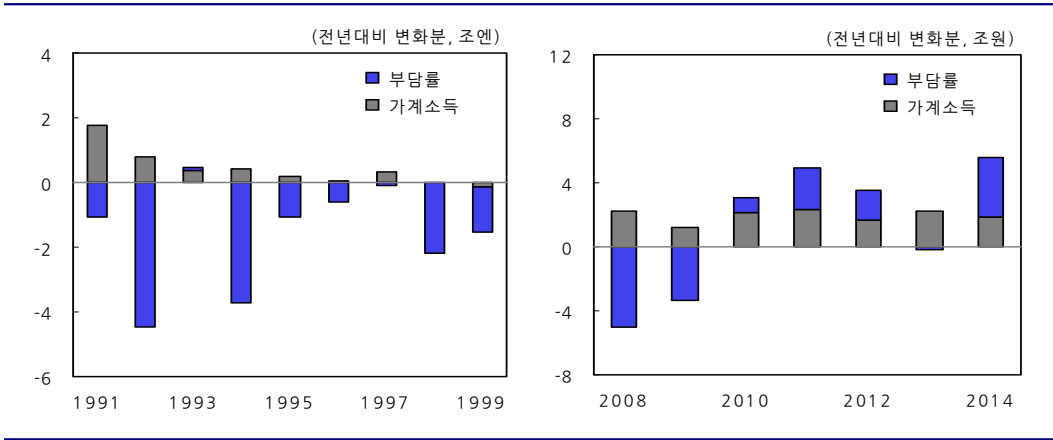
4) 소득세원인 가계소득은 국민총소득(GDI) 중 가계의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을 합산한 수치이다.

5) 법인세원인 기업소득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이며, 이에 따라 국민계정상의 기업소득과는 괴리가 있다. 예컨대, 2012~14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법인당기순이익이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국민계정상 기업소득은 연평균 3.7%씩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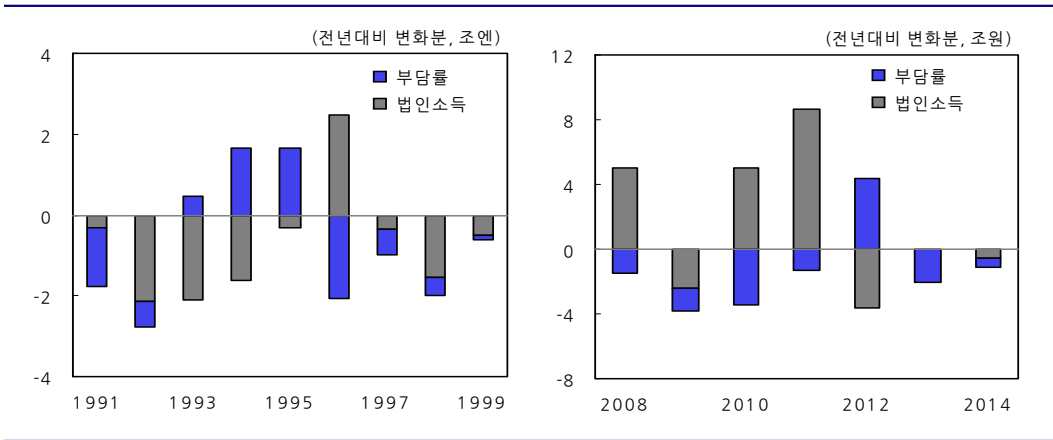
6) 부가가치세원(일본의 경우 소비세원)은 수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전체 내수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입의 일부이므로, 본고에서는 국세수입상 부가가치세 실적에 지방소비세를 합산하였다. 예컨대, 2014년 국세수입상 부가가치 실적은 57.1조원이었으나, 지방소비세를 포함하여 64.2조원이 징수된 것으로 보았다.

입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97년의 소비세율 인상 이전까지는 부담률의 영향이 미미하였으나, 이후 부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수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담률은 대체로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4년 부가가치세수는 20조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 중 14조원 정도가 내수 증가로, 7조원 정도는 부담률 상승으로 설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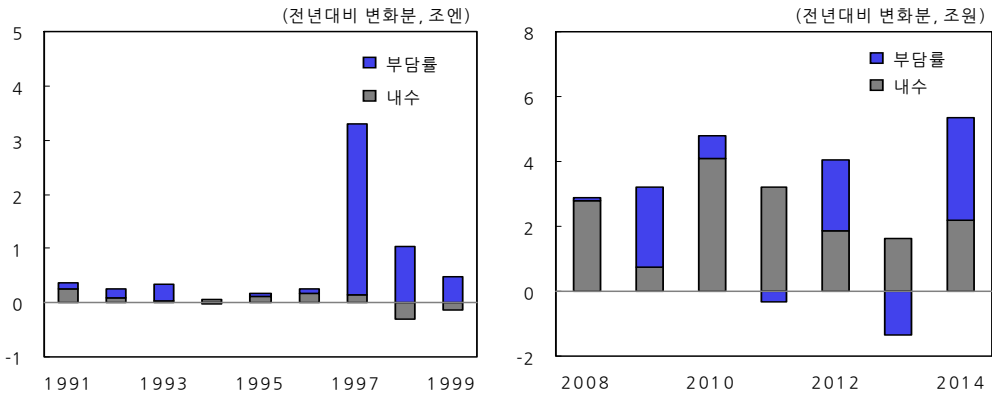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좌) 및 한국(우) 소득세 변화분 분해 결과



<그림 5> 일본(좌) 및 한국(우) 법인세 변화분 분해 결과



<그림 6> 일본(좌) 및 한국(우) 법인세 변화분 분해 결과



## 라. 세목별 부담률 변화에 대한 종합 평가

일본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70%(1990년 기준) 정도를 차지하던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면을 실시하면서 구조적으로 부담률이 낮아졌으며, 이는 경상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세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1990년 기준 7%)이 낮아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감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하였으며, 이는 아직까지 주요 세목에서의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세수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이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세원 대비 세입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과거 일본과 같이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반복하지 않았으므로 주요 세목의 부담률이 향후에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세입여건은 세수탄성치의 변화보다 세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경상성장률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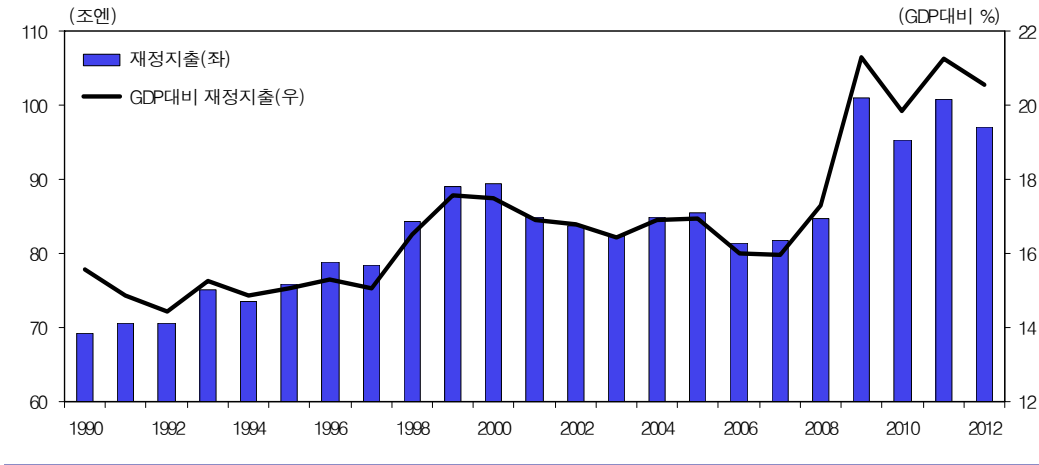
## 3. 재정지출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1) 일본의 재정지출 추이

재정지출 측면에서 보면 일본 재무성은 1990년 이후 2012년까지 정부의 국채발행 증가액(603조엔) 중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하는 금액이 334조엔인 것으로 시산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지출이 210조엔, 지방교부세 부담 증가에 78조엔, 공공사업 확대에 57조엔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나, 재정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7>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지출 추이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증가 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이다. 일본의 사회복지지출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최근까지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110조엔 규모인데, 이에 상응하는 재원은 사회보장기여금(62.2조엔)과 지방세(11.2조엔) 및 자산소득 이외에 29.7조엔의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즉, 사회보장지출 규모와 재원 간의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며, 동 규모가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의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사업과 관련한 재정지출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SOC 자본스톡 증가율은 국민경제의 성숙으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일본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경기부양 차원에서 공공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로 인해 해당 기간 중 SOC 관련 자본스톡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90년 이후 2013년까지 일본의 건설국채 누적 발행액이 238.3조엔으로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전재원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지방교부세율은 1954년에 소득세, 주세의 19.9%, 법인세의 20%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현재는 소득세, 법인세, 주세의 32%, 소비세의 29.5%, 담배소비세 수입액의 25%를 지방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이전재원 호가대로 중앙정부의 지출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지방정부는 대체로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즉, 다수의 소규모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재정부담이 중앙정부로 이전된 것이다.

## 2) 우리나라의 지출 구조

현재 우리나라의 지출 구조는 1990년대 일본과 유사한데,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가 일본과 같이 매우 경직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전체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로 볼 수 있는 복지 관련 지출이 50%에 가까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분야 및 기타지출에 대한 지출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일본에 비해 다소 완만하게 나타날 여지는 존재한다. 사회복지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 및 의료 보험 구조가 일본과 차이가 있고,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공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의 진전과 이에 따른 연금제도 성숙으로 노후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증가하면서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의 의무지출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향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므로 신축적 재정지출의 여지도 크지 않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되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출측면에서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여지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총량적으로는 악화된 세입여건에 맞추어 총지출을 조절할 여지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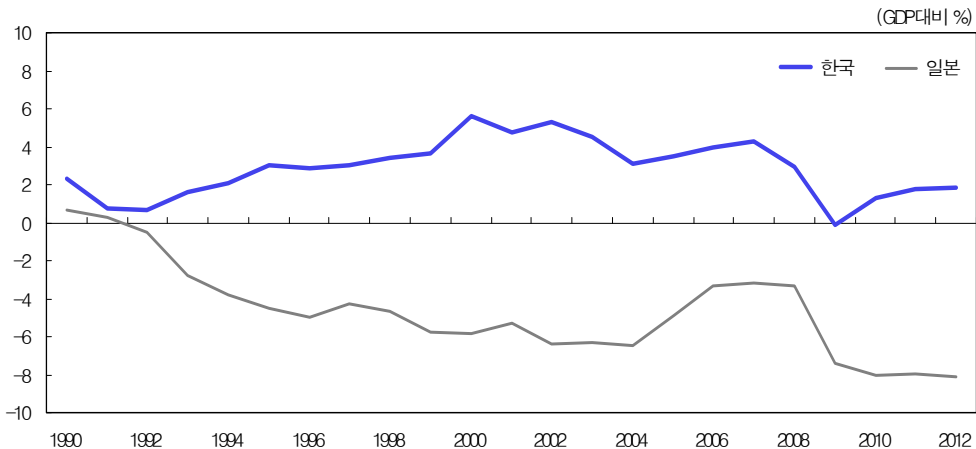
<그림 8> 우리나라의 제도유형별 복지지출 전망



#### 4.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정부가 재정수지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그림 9>와 같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후반까지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 이후부터는 적자로 전환된 가운데 적자폭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구조적 재정수지가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어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에 처음으로 구조적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는 흑자폭이 2000년대 이후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9> 우리나라와 일본의 구조적 재정수지



한편, Bohn's test를 이용하여 양국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보았다.<sup>7)</sup>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초재정수지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재정이 지속가능하

7) Bohn(1998)은 재정수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의 함수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정수지는 경기 변동 및 재정적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s_t$ 는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d_t$ 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의미한다. 또한  $y$ 는 GDP,  $g$ 는 정부지출이며,  $y^*$ 와  $g^*$ 는 각각 HP필터를 이용한 GDP와 정부지출의 추세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GDP 대비 국가채무의 계수인  $\rho$  값의 부호에 따라 판단한다. 만일,  $\rho$ 가 양(+)의 값인 경우, 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정책대응이 유의함을 의미하므로 국가재정은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rho$ 가 음(-)의 값이라면, 국가채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은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 못한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계수값이 0.095로 나타나 재정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재정여건이 199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지속가능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987년 이후부터 매년 시계열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recursive methods)으로 시점별  $\rho$  값을 추정하였는데, 예상한 바와 같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계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양(+)의 값을 보였으나, 이후부터는  $\rho$  값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다.

<표 1> Bohn's test 결과

	일본			한국		
	계수	표준편차	p-value	계수	t-Statistic	p-value
$\alpha_0$	0.023	0.004	0.000	-0.008	-1.849	0.078
$\rho$	-0.045	0.004	0.000	0.095	4.713	0.000
$\alpha_G$	-1.123	0.241	0.000	-1.229	-5.700	0.000
$\alpha_Y$	-1.724	0.435	0.000	-1.711	-3.479	0.002

## 5. 정책적 시사점

앞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일본의 1990년대 초반보다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적 재정수지가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또한 1990년대 초 일본보다 낮은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990년대 초반의 경제상황을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인식하고 공공사업을 크게 확대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SOC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추세이다. 결국 기초 재정여건과 제도적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어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일본과 같이 급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일본과 비교하여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측면에서 과거 일본처럼 세원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출측면에서도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의 빠른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측면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및 수입과 관련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정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s_t = f(d_t) + \mu_t = \alpha_0 + \rho \cdot d_t + \alpha_G \cdot GVAR_t + \alpha_Y \cdot YVAR_t + \epsilon_t$$

$$\text{where } GVAR_t = \frac{g - g^*}{y}, YVAR_t = (1 - \frac{y}{y^*}) \frac{g}{y}$$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 · 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 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 ■ 참고문헌

- 국중호, 『일본의 사회보장 · 조세의 일체 개혁과 한국에의 시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12.
- 국회예산정책처, 『2012~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2012.
- 김형태 · 박 현 · 김재영, “SOC(교통부문) 총괄,”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교통) 부문』, 기획재정부, 2013.
- 서세욱, “일본 재정개혁 사례의 시사점,” 『예산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12.
- 이재준, “일본의 19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KDI 경제전망』, 2014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 2014.
- Bohn, Henning, “The Behavior of US Public Debt and Defici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tumn 1998, pp.949–963.
- Cazacu, Roxana,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Lessons from Japan 1990–2007,” Mosler Economic Policy Center, 2009.
- Fueki, Takuji, Ichiro Fukunaga, and Masashi Saito, “Assess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Japan with Estimated and Calibrated DSGE Models,” Bank of Japan Working Paper Series, No. 11–E–9, 2011.
- Kuttner, N. Kenneth and Adam S. Posen, “Fiscal Policy Effectiveness in Japan,”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6, 2002, pp.536–558.
- Milesi-Ferretti, Gian-Maria, Perotti Roberto, and Massimo Rostagno, “Electoral Systems and the Composition of Public Spend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7, 2002, pp.609–657.
- Tsuri, Masao, “Discretionary Deficit and Its Effects on Japanese Economy,” *Applied Economics*, Vol. 37, 2005, pp.2239–2249.